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 만에... 대법 '손배 책임' 첫 인정

“옥시·납품업체는 500만 원 지급하라” 원심 확정 3등급 판정 피해자 1심 패소 딛고 최종 승소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 만에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대법원 1부는 원고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리킷벤처(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정확한지

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앞서 2심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에 상당하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가 정확히 적용됐다”고 본 것이다.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은 원고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민사배상책임소송 법원 판단

2007년 11월~2011년 4월 김모 씨,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	1심	2심	대법원
2013년 5월 김 씨, 간질성 폐 질환 등 진단	청구 가액	위자료 500만 원 지급	
2014년 3월 당시 질병관리본부, 피해 등급 3등급 판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 존재)
2015년 2월 김 씨, 옥시리킷벤처·한빛화학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자의 민사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하급심(2심) 판결 원고 일부승소 확정			자료: 법원 연합뉴스

왔다. 김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리자 피해 구제 차원에

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허검 기자 kh@skyedaily.com

“한평생 좌우 치우침 없이 법관생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 다할 것”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밝히고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대법원의 공정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며 금강경에 나오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을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지명 소감을

표현했다. 조 후보자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지명 소감을

허검 기자 kh@skyedaily.com

서울지하철 경고파업 한충련 불참... 대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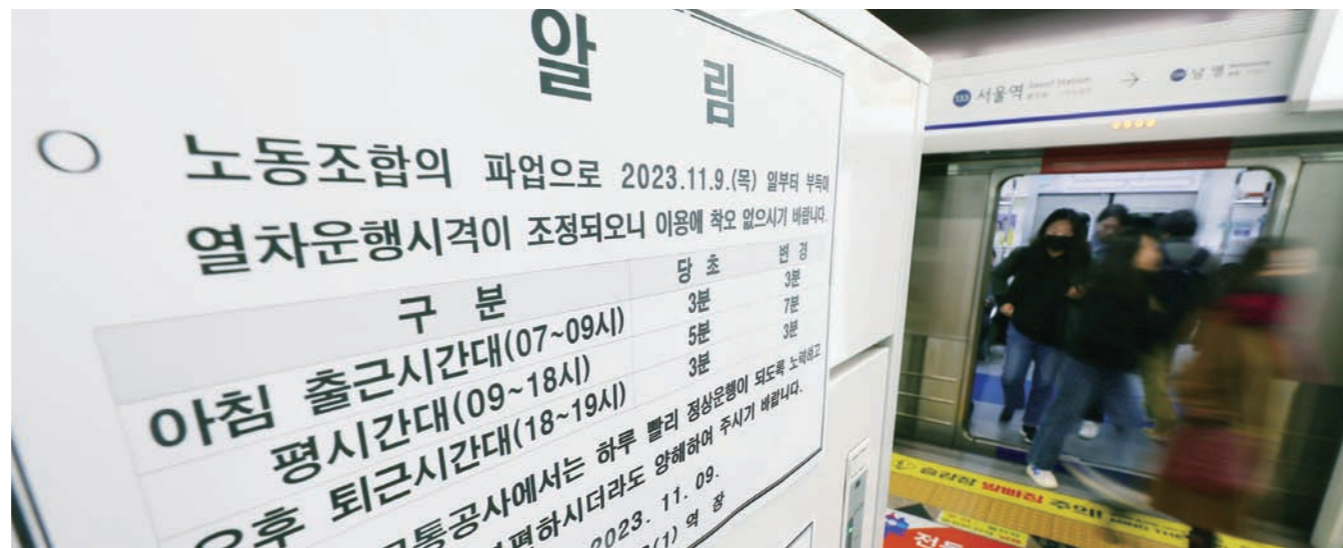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총력 출근시간대 지하철 100%유지 市, 오늘까지 비상수송책 가동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노동조합이 10일까지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구 서소문청사 1동 7층에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코레일버스-업계-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상황별 비상수송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퇴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퇴근 시간 이용 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 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노동조합이 10일까지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다. 연합뉴스

혼잡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파업 미참여 자·협력업체 직원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직원 124명이 역사 근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돼 혼잡도를 관리하고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 혼잡상황을 대비해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편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07~09시, 18~20시)을 1시간 연장(07~10시, 18~21시)한다.

단축 차량 및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250개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배차 시간(07~09시, 18~20시)을 1시간 연장(07~10시, 18~21시)하고 다림쥐 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 추진 및 시민 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는 한발

씩 양보해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는 사측에 제시한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철회 등의 요구에 대한 교섭이 결렬되자 9~10일 이틀간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경고 파업 직전 한국노총 통합노조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업 참여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남현희, 전청조와 공모 여부 첫 대질 신문

경찰, 전씨 진술 확보 사실 여부 확인 주력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범행 일체를 인지했고 사전 공모했다는 옛 연인 전청조(27)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첫 대질 신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쯤부터 남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구속된 전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남씨가 범행 일체를 사전에 인지했고 공모까지 했다는 전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3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한 지 이틀 만이다. 남씨는 이날 오후 11시 남짓 조사를 마치고 송파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 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공모 의혹을 두고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인 고소인이 이날 대질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고소인)는 남씨가 전씨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며 취지로 진술했다”며 “전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남씨가 올해 3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컨디션 이유로 조사를 더 받지 못한 남씨가 회복하는 대로 추가 대질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 20명, 피해액은 26억 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검 기자 kh@skyedaily.com

중소기업 성장을 향해
우리, 함께, 같이

외국인고용허가제

국내 산업현장의 성장을 이뤄낼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상생”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19년동안 94만명의 외국인력 입국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